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17차시. 영업비밀 침해 및 분쟁사례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영업비밀 침해행위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례 및 관련 판례

▶ 학습목표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V.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와 분쟁사례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파괴 행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당해 정보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자에게는 그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1. 영업비밀 침해

(1) 내부자에 의한 침해

내부자에 의한 침해 행위는 재직 중의 침해 행위와 퇴직 후의 침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재직 중인 자에 의한 침해는 다시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전직에 의한 침해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퇴직자에 의한 침해 행위는 대부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시점에는 그 행위가 정당하였으나, 퇴직과 동시에 정당하게 얻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빼낼 의도로 이루어진 헤드헌팅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외부인에 의한 침해

외부인에 의한 침해 행위는 내부자와의 공모에 의한 침해와 외부인에 의한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외부인의 내부자와의 공모에 의한 침해 경우는 정보의 영업비밀성과 함께 내부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문제가 된다. 외부인이 직접 영업비밀에 위법하게 접근하지 않고, 정당 접근 권한자인 내부자에게 부정한 사용·공개를 하도록 하거나 권한 없는 내부자가 부정 취득, 사용, 공개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당해 정보의 영업비밀성과 이에 침해한 내부자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 내부자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공모자인 외부자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

가 판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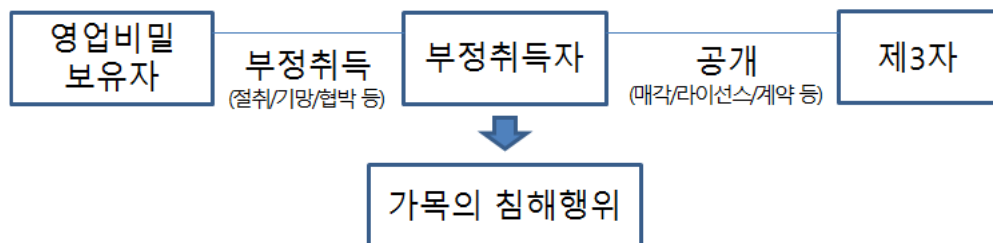
(3) 계약 관계자에 의한 침해

통상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하거나 영업비밀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경우, 계약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호가 문제가 된다. 계약 일당사자인 라이선서의 비밀관리 노력이 영업비밀 보호의 관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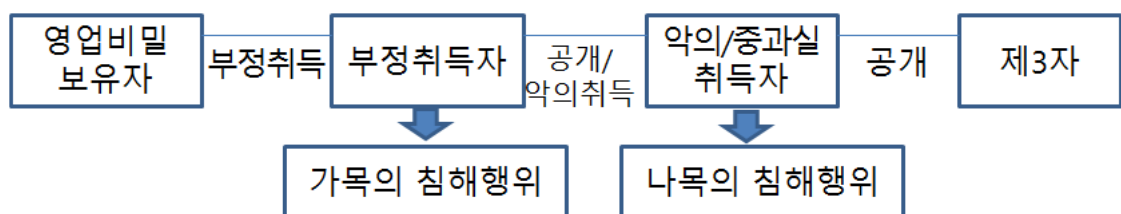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다음의 6가지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침해 유형은 부정취득과 관련된 것과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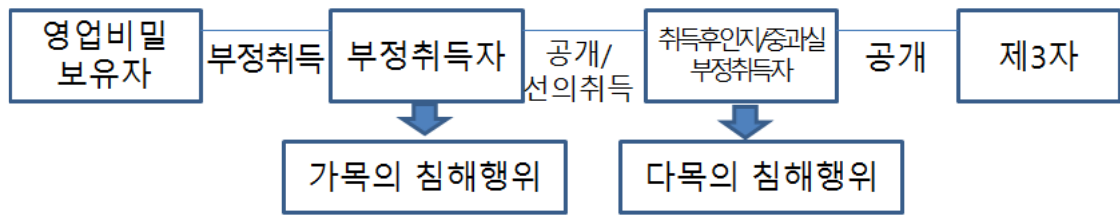
①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제2조 제3호 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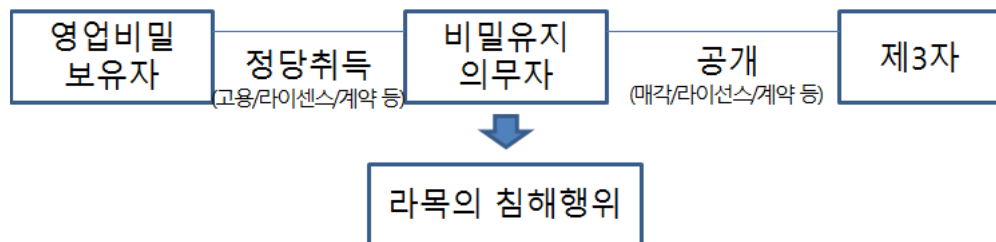
②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제3호 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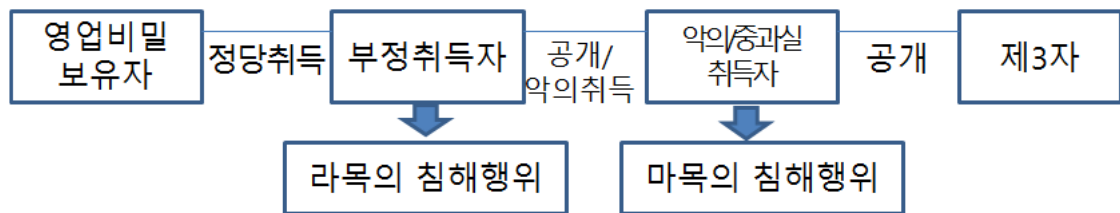
③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로 사용/공개(제3호 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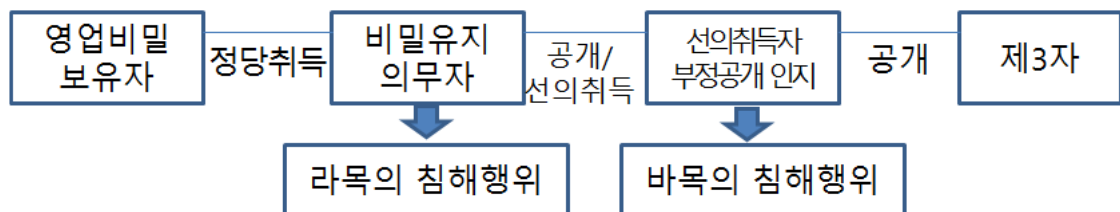
④ 영업비밀을 부정사용/공개 행위(제3호 라목)



⑤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제3호 마목)



⑥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행위(제3호 바목)



(1) 부정취득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과정에 절취, 기망 등의 불법한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부정취득행위는 정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입수할 지위

에 있지 않은 자가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취득한 그 정보를 스스로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득을 얻거나 특정한 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비밀을 전득, 공개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부정취득행위에 있어서, 절취, 기망이나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하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에도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법 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미인계, 도청, 매수, 위장취업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취득행위의 유형

경쟁업체의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행위에 있어 경쟁업체의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가 단순한 노동력의 확보나 그 직원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수 없지만,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높은 직위나 고액 급여에 의한 매수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스카우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며, 전직한 직원 역시 전 회사와의 계약관계나 부정한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생산시설에 잠입하여 영업비밀을 탐지한 제3자의 행위에 있어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행위로서 이는 침해행위에 해당되며, 이와 함께 형법상의 주거침입 내지는 절도죄 등도 성립할 수 있다. 그 취득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게 된다.

- 영업비밀 그 자체인 유체물(비밀의 촉매나 신제품 등)이나 영업비밀이 기재된 유체물(설계도나 고객명부 등)을 절취하거나 사기, 협박, 기타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
- 영업비밀의 매체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영업비밀의 매체물을 보관하고 있는 책상, 금고, 봉투, 플로피 디스크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사용하여 안에 들어있는 영업비밀을 기억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협박, 도청 등의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사용행위

사용행위란 영업비밀을 그 고유의 용도 내지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3) 공개행위

공개행위란 영업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공공연히 알리거나 또는 그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취한 대량주문서 등을 산업스파이에게 인도하는 행위나 절취한 공사견적서 등의 기밀서류를 경쟁회사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영업비밀을 부정공개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밀, 지식 등을 제3자가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영업비밀 전부는 물론이고 그 일부만을 알 수 있게 한 경우는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을 공개한 상대방이 이미 그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한 공개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판례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 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후,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로 당해 영업비밀을 전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부정취득자로부터 직접 취득한자(전득자)뿐만 아니라 전득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행위 유형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

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된다. 이는 (가)목의 부정취득행위를 전제로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부정취득이 개입된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전득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가)목의 부정취득행위를 본범이라면 (나)목은 장물범적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

2) 적용 요건

① 악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수단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일 것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취득자가 앞선 부정 취득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수단 그 자체는 정당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원래의 보유자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인 (가)목 소정의 침해행위가 된다.

②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것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이란, 영업비밀이 정당한 보유자로부터 자신의 앞선 자에게 이르는 영업비밀의 유통과정 중에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이 개입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부정취득은 취득자의 직전 보유자의 부정 취득행위는 물론, 그보다 앞선 영업비밀 거래단계의 부정취득까지 모두 포함한다.

(3)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된다.

1) 행위 유형

본목의 행위는 (가)목이나 (나)목과 달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후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행위만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되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2) 적용 요건

취득 당시에는 부정취득의 개입 여부에 관해 선의, 무중과실이었던 자가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 경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금지청구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사후적 악의자가 된다. 그리고 보유자 등으로부터 경고나 소장의 송달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간의 주의로 부정취득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적 중과실이 인정된다.

(4) 부정공개 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부정공개행위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 본 규정은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 요건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부정공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계약관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사실상의 신뢰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는다 함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란 영업비밀보유자의 실제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입힐 의도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뜻한다.

③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사용행위란 영업비밀을 그 고유의 용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행위란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 ‘공개’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을 유지하면서 소수의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5)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 행위

1)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 행위 정의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마)목). 본목은 (라)목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다는 이중의 주관적 요건을 가진다. 따라서 (마)목에 의거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자는 부정공개행위 개입 사실을 인식했다는, 또는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사실과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적용 요건

(마)목은 부정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마)목은 (라)목의 침해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직접 취득, 사용,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시 전달받은 자가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6)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 행위

1) 적용 요건

(바)목은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영업비밀인 줄 모르고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후에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

2) 취지

(바)목의 규정 취지는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한 영업비밀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7) 선의자 특례

1) 취지 및 효력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즉, 영업비밀 보호법은 특례 조항을 두어 제2조 제3호 (다)목, (바)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취득 시에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사실 또는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의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거래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2) 적용 요건

① ‘거래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

본조의 규정은 ‘거래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래’는 매매는 물론이고 양도계약, 라이선스 계약, 증여계약, 대물변재 등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법률상의 전형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실상의 거래를 포함한다. 거래에 의한 취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이나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말한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보호 범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꾀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어 침해금지 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사례 및 관련 판례

(1)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사례

1) 퇴직 직전 빼돌린 기술로 창업 적발 사례

퇴직 전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 국내 시장점유율 2위에 오른 기업과 회사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7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출한 원료공급

업체 정보, 원료관리표준, 소결자료, 금형설계자료 등은 원고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해 온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 같은 영업비밀을 참고해 유사제품 생산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전문경영인 출신인 K씨가 2011년 5월 말 퇴사하면서 사정은 급변했다. K씨는 당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소결자료 등을 USB등에 담아 유출하고, 신생공업 핵심 생산인력 30명을 빼돌려 OO공업과 업종이 비슷한 K사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 OO공업의 매출은 2011년 434억여 원에서 지난해 286억여 원으로 줄었다. 반면 K사는 회사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도약했고, 매출도 2012년 57억여 원에서 지난해 114억여 원으로 급증했다. K사는 이 과정에서 한 일본 기업을 끌어들여 OO공업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피소됐을 경우 대응방법까지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공동배상을 판결했다.

(출처: 한국일보 2016.07.26. 기사)

2) 중소기업 신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던 기술닥터 적발 사례

경기도지방법원경춘청은 2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안산시 상록구 김모(57)씨가 운영하는 기계부품세척기 개발업체인 A회사에 '기술닥터'로 일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친환경기계부품 세척기술을 2009년 11월 미국환경회사에 2억4000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미국 환경청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고 영업비밀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건네받은 자료로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사의 친환경기계부품세척기술이 미국 환경청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지 못해 최씨의 기술매각과 특허출원은 실패했다. 기술닥터 사업은 국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연구자원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파견돼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 2009년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11.11.2.)

3) 에어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전직 직원 적발 사례

부산경찰청은 24일 공기압축방식의 에어툴 공구 제작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정모(3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전씨는 경남의 한 공구업체에서 연구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4월께 중국 베이징에서 기계공구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정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퇴사하면서 에어툴 관련 기술을 메모리 카드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기술을 건네준 대가로 정씨의 중국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다가 정씨와 갈등으로 2008년께 퇴사한 뒤 국내에 동종 업체를 설립, 유사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툴은 철판, 유리 등을 절단할 때 발생하는 절단면의 거칠고 예리한 부분을 부드럽게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공구다. 전씨가 빼돌린 에어툴 공구제조기술은 피해업체가 지난 15년간 45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로 이번 수사로 관련자를 검거함에 따라 향후 5년간 1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11.10.24.)

4) 옛 직장 메일서버 침입, 영업기밀 빼낸 전직 직원 적발 사례

경남 밀양경찰서는 25일 과거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메일 서버에 침입해 영업기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유씨가 빼낸 회사 기밀을 넘겨받은 손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2009년 11월부터 8개월 가량 근무한 밀양시 소재 모 선박기계 회사의 관리자 패스워드를 이용해 이메일 서버에 침입해 회계자료, 계약서, 용접장비 핵심기술도면 등 주요 기밀을 빼낸 뒤 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 외국계 회사로 이직한 손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고 추가 공모자가 있는 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1.10.25.)

5) 연봉 때문에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30대 적발 사례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연봉 협상에 실패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남구 삼산동의 한 IT업체 기술지원부 과장에서 경쟁업체의 서비스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1만1천700여개를 가지고 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기존 회사에 연봉 4천만원을 요구했으나 2천900만원으로 결정되자 불만을 품고 회사 보안서버에서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몰래 외장 하드로 내려받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기존 회사에 피자가게를 차리려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며 "유출된 영업파일이 새로 이직한 업체에서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1.10.18.)

6) 경쟁사로 이직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30대 적발 사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14일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전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H캐피탈 동료였다가 함께 W파이낸셜로 이직한 김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W파이낸셜로 이직한 후에 H캐피탈에 재직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H캐피탈 자동차 정비시스템에 로그인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H사의 자동차 정비시스템 화면 80여건을 캡처하는 수법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W사는 자동차 관련 리스사업을 시작하면서 김씨에게 이직을 제안했고 W사 직원들이 H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상담, 보험견적, 심사, 관리 등이 담긴 캡처 화면을 입수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W사에서 사용하는 영업비밀 문서의 문서보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W사의 영업비밀 문서 424건도 빼돌릴 수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11.9.14.)

7) 반도체 제조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사례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28일 반도체 생산공정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부산 T업체 전 수석연구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제품을 생산한 I업체 전무이사 김모(40)씨 등 이 업체 관계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이씨는 김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지난해 5월 T업체를 퇴사할 때 반도체 생산공정 제조기술(IGS)을 외장형 하드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유출한 기술은 T업체에서 8년간 6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때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업체는 독점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명 반도체 생산업체에 관련 부품을 납품해 왔다. I업체는 이씨에게 연봉의 2배와 주택제공을 조건으로 스카우트해 최근 시제품까지 생산, 반도체부품 전시회에 출품까지 하고 판매망 확보에 나섰으나 경찰의 수사로 생산이 중단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1.7.28.)

8) 근무업체 영업정보 빼내 창업한 20대 적발 사례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정보를 빼내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차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결혼컨설팅업체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관련 정보와 2천500여명에 이르는 회원자료를 빼내 곧바로 결혼컨설팅업체를 창업해 피해 업체에 7억2천여만원(피해업체 주장)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두 달가량 피해업체에서 근무하며 몰래 빼낸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이용해 피해업체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뒤 곧바로 퇴사해 영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2011.6.23.

9) 수백억대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 일당 적발 사례

핵심 산업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핵심기술 영업 비밀을 몰래 빼내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소기업 K사의 前부사장 배모(50)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K사와 중국 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던 싱가포르인 L(48.미검)씨 부부 등과 공모해 핵심기술 영업 비밀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K사와 거래했던 L씨 제의로 한국과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동종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납

품하기로 모의했으며 L씨가 25억원을 투자해 실제로 중국 하얼빈과 경기도 일산에 본사와 지사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짝통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공장에서는 아예 K사 상표를 붙인 동종제품 2만1000여개(42억원 상당)를 만들어 이란 등 제3국에 수출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사업계획이 무산됐다. K사의 '절전관리장비 제조기술'은 전기 저항으로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유효에너지로 전환해 절전 효과를 내는 기술로 이 회사 제품은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K사는 동종업계 선두로 손꼽힌다. 이들은 K사의 절전장비 제조기술을 자신들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특허 출원까지 신청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투자, 연구비용과 향후 5년간 매출액 등을 포함해 K사의 피해액이 8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이투데이, 2011.6.3.)

10) 이직하면서 회사 정보 빼낸 LG전자 전 부장 적발 사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26일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LG전자 정모 전 부장(39)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LG전자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인 모토로라코리아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이용, 지난해 2월 3일 모토로라코리아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외장하드에 다운받아 빼돌린 혐의다. 정씨는 모토로라코리아에서 퇴사한 후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기존에 갖고 있던 출입카드로 서울 양재동 모토로라코리아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2월 LG전자로 이직이 확정돼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20일부터 LG전자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모토로라코리아의 퇴사는 같은 해 2월 28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가 빼돌린 파일은 249개에 이르며 빼돌린 정보는 동종업체인 LG전자 업무용 노트북에 옮겨 모토로라코리아 피해를 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7월 19일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해 무선통신장비 판매 영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빼돌린 영업비밀이 LG전자에서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직해 간 회사에 잘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11.8.26.)

11) 영업비밀 유출 OO사 전 간부 적발 사례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품회사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5일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OO사 부장 김모씨(52)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OO사가 오랜 기간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누출한 김씨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이 김씨가 25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바이오사업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을 원치 않은데다 유출한 영업비밀이 경쟁사에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5년간 OO사에서 근무한 김씨는 회사로부터 퇴직 압박을 받던 중 경쟁사인 B사에서 이직제의를 해오자 이를 승낙,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7건을 B사에 건넨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11.4.5.)

12) 국내 공병검사장비 핵심기술 일본기업에 빼돌린 일당 적발 사례

국내 공병검사장비 국산화 개발 전문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일본 유명 주류 제조업체 계열사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씨(43)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공병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P사 영업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1월 동일한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주류 제조업체 계열사 K사로 이직, 설계도면 파일 등 핵심 기술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해 K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빼돌린 도면은 이 회사의 5개 주종 품목 100여 장에 달하며 이 중 장씨는 기술·영업비밀을 유출키로 K사측과 공모, 이직한 뒤 판매액의 10% 가량을 별도 인센티브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PET병과 유리병 등의 불량품을 가려내는 검사인 공병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P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2002년 해당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국내 시장을 독점하던 K사측이 P사의 해당

기술 국산화가 성공하면서 국내 영업이 위축되고 중국 시장에서도 충돌이 우려되자 장씨를 영입한 것으로 판단, 당시 K사 대표 F씨와 이 회사 한국 지점장인 일본인 O씨를 지명수배했다. P사 제조 장비는 국내 물량의 30% 가량을 차지해 왔으나 기술 유출 이후에는 점유율이 10%대로 줄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향후 5년간 40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 관리가 이뤄졌지만 피의자들이 관리자 위치에 있다 보니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11.4.5.)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판례

1) 전업금지가처분(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언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가처분(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계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인 1992. 12. 15. 전에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으로 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신청인 회사에서 퇴직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대표이사 자신 또는 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및 기술을 기초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부칙(1991. 12. 31.)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기한 금지가 처분신청을 기각함.

3)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가처분(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4) 가처분 이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

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약정금(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6) 손해배상(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7)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 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당해 업체의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당해 업체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그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誘引)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4]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

득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타 회사로 하여금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타회사로 전직하여 타 회사에서 그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위 [4]항에서 그 연구실장을 스카우트한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같은 법 시행 후에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후단에 의하여 허용되나,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8]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고용되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한 행위 자체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노트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노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그 노트에 대한 폐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는 그 현존 여부를 밝

한 다음 그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8)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가처분(서울지법 1997. 6. 17. 자 97카합758 결정)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9) 손해배상(서울지법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1]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맥주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생산하여 이를 광고함에 있어 그 사용한 문구가 피해자가 이전에 제출하여 회사가 현재도 소지하고 있는 제안서에 기재된 광고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비록 그 광고를 제3자가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맥주회사가 위 제안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위 광고 문구 작성에 피해자의 제안이 참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광고 문구를 사용한 맥주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 손해배상(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 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장·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1)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가처분(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12987 결정)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

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2]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종 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 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 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14)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06.10.27. 선고2004도6876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